



한국마사회 제공 사진

한국마사회의 외주화와 경쟁 강요로 문중원 기수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관련 기사 12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자본주의

3, 4면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개적인
여대 입학
지지하라

10면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9면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2면

특별연장근로 확대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8면

임금 억제 위해
속도 내는
직무급제 도입

11면

국제

-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과 버니 샌더스
- 프랑스 대파업

6~7면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선영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의겸이 얼마 전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꼬리 자르기 한 것일 테다.

그런다고 민주당 정부가 서울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피해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43퍼센트 상승했다. 상위 1퍼센트가 지난 2년여간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 돈이 1인당 49억 원에 달한다(경실련). 평범한 노동자들은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을 부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벌어들인 것이다.

그러니 집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불평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평등 심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등 자산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단 30명이 주택 1만 1000채를 가지고 있다. 10살 아이가 주택 19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다.

반면 청년 셋 중 하나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를 전전해야 한다. 서울의 청년 단독 가구 중 37퍼센트는 소득의 30퍼센트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 ‘흙수저’의 비애인 것이다.

경기가 악화하고 실업 문제가 심해지면서 이주노동자 8명이 방 두 칸에 모여 살거나, 5인 가족이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사는 등의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

민주당 인사들은 흔히 집값 상승을 박근혜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린다. 물론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은 2016년경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온갖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노동자와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보다 기업들을 위한 경제 성장 부양에 우선순위를 뒀 왔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퍼센트에 겨우 턱걸이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9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직전 해에 견줘 40퍼센트가 줄었다.

이처럼 기업의 이윤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 경기를 부양하려고 금리를 역대 최저(1.25퍼센트)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이윤율이 낮아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예금 등으로 존재하는 부동산금이 1000조 원에 달한다. 이런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흘러들어 거품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뒷북이거나 솜방망이로 진행됐다. 문제



그림의 떡 지난 5년간 거의 두 배로 오른 서울 아파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인 정부 들어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대책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언론들이 “역대급”이라고 부르는 이번 대책도 별 효과가 없었던 지난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다.

12·16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을 금지하고,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앞서 “역대급”이라던 2018년 9·13 대책도 과거보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금세 효과 없음이 드러났다. 몇 개월 간 조정기간을 거치고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가파르게 올랐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대출 규제를 해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16 대책에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포함돼 있지만 여전히 미약하다.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퍼센트 인상됐다. 2018년 9·13 대책 때의 인상폭(0.2~0.7퍼센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9·13 대책이 나왔을 때도 자유한국당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9·13 대책이 반영된 2019년 종부세 평균 세액을 보면,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의 60퍼센트

를 차지하는 시세 기준 17억 6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연평균 33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여전히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정부의 말과 다르게 턱없이 낮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집

값의 기준이 되는 25개 아파트 표준지의 2020년 공시지가는 시세의 33퍼센트에 불과하다. 고가빌딩의 공시지기도 시세의 37퍼센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법인이나 주택임대사업자의 부동산 소유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에서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 80만 채 중 47만 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반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는 신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난해에 견줘 18퍼센트나 늘어 23조 원에 달한다.

이런 돈이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인다면 서민 주택난은 금세 해결될 것이다. 이미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 터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기업의 이윤을 보조해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개선책은 실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금으로 기업들에게는 돈벌이를 보장하는 민자사업 방식(민영화)으로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 건설,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공공요금에 인상돼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다. 부패 문제도 커질 것이다.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집값을 들쭉이게 할 개발 정책들도 연신 발표되고 있다. 수서역세권 개발, 여의도 26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이처럼 실물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해 온 것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요 배경이다. ‘빚 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 속에 가계부채 시한폭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선 부동산 정책

친시장 민주당·한국당, 친서민 정의당·민중당

자유한국당은 더욱 노골적인 친시장 정책을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고며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내리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집이 투기 수단이 된 상황에서 비싼 민간분양 중심의 아파트 공급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존에 밝힌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을 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가 아닌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취지에 걸맞지 않게 너무 비싼데도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전혀 없다.

시민단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민

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총선공약이 “20대 총선에 비해 후퇴했다” 하고 평했다. 자본가에 기반한 두 주류 양당이 경제 악화 속에 더욱 친시장적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택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시장 원리가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의 필요를 우선해야 한다. 정의당·민중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은 노동자·서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개혁 방안들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전월세를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회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제시했다. 또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공영 건설해 건축비를 낮추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반의

반 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공약에는 다주택자와 기업들의 종부세 인상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계획을 따르더라도 여전히 보유세 실제 세율은 OECD 평균(0.33퍼센트)에 못 미치는 0.28퍼센트이다. 더욱 과감하게 부자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중당은 불로소득 환수법을 만들어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상한제를 통해 주택 구매 이후 3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는 9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맞서 진보정당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윤 논리에 맞서는 계급 투쟁이 전진할 때 노동자·서민을 위한 개혁 정책들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들춰 내다

장호중

2월 5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누적 환자 수뿐 아니라 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만 455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치료 중이고 3223명은 위독한 상태다. 치사율은 감염자 중 사망자 수로 집계하므로 지금은 2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경과를 마친 환자 중 492명(35퍼센트)이 죽었고, 907명(65퍼센트)이 회복됐다.

치사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지는 않다. 초기에는 병의 원인도 몰랐고 치료법도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원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도 알아냈고, 기존의 항바이러스 제제들을 섞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치료법도 찾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의료진 8000명을 우한 지역에 긴급 투입했다. 우한 인구가 10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다. 2월 4일부터는 대형 전시장에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기록 사진에서나 보던 제2차세계대전 당시 대형 야전 병원과 흡사하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미국이 견제할 정도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달한 중국에서 반세기 전이나 봤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와 야전 병원

사실 정체를 모르는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이토록 신속히 바이러스를 찾아낸 일은 역사상 흔치 않다. 놀라운 기술 발전 덕분에 비교적 초기에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다. 또, 유전자를 확인한 덕분에 신속히 감염자를 밝혀낼 수 있는 진단법이 도입됐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중국 정부 관료들이 초기에 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입막음하려 하지만 않았어도 상황은 훨씬 나았을 것이다.

유전자 분석 기술 덕분에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게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점도 알려졌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심지어 사람 간 전염이 확산하면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거의 실시간으로 밝혀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 몸속을 오가며 적자생존, 자연 선택 등 다윈의 진화론을 몸소 보여 주고 있다. 어떤 돌연변이체는 체내에서 멸종하겠지만, 다른 경우는 변창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진화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멈추면 백신 개발에까지 성공할 수 있지만, 수백만~수천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바이러스는 수많은 진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산

성을 고도로 높이려고 노동자들을 집중시킨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의 산물이다.

중국 지배 관료는 사스 사태 이후 이런 도시를 유지하려면 방역과 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지만 바이러스의 진화가 더 빨랐다. 지난해에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을 휩쓸었는데, 그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화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도입된 공장형 축산업은 바이러스가 중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대 구실을 한다.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월 3일 중국과학원 상하이 파스퇴르연구소 연구진의 말을 인용해, “바이러스 유전자의 중대한 변화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17건의 비유사 돌연변이가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비유사 돌연변이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돌연변이를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처럼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만나면 치사율이 높은 신종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2000년 이후 벌어진 여러 차례의 감염병 사건(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돼지독감, 메르스 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그 확률이 매우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진화

각국 정부가 각자 나름으로 바이러스를 확보하려 애쓰는 것은 이처럼 계속 일어나는 돌연변이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 간 경쟁 논리가 깔려 있다.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까지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래에 닥쳐올 전염병과 그때 필요할 백신 제조기술도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여겨진다. 이런 기술은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둔 거대 제약회사들에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준다. 머크(MSD) 사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로 2019년 3분기에만 1조 5358억 원을 벌어들였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사는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로 같은 분기에 8000억 원을 벌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자들 일부는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생물무기 연구 과정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이런 ‘사고’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마침 우한에 고위험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열강은 세계 곳곳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수집해 보관한다. 거기서는 천연두처럼 인간 사회에서는 더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도 ‘미래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미 백신 개발이 끝나 예방용으로는 쓸모가 없다.



야전 병원을 떠올리게 하는 우한의 임시 병원

국경 봉쇄는 (얼마나) 효과적일까?

미국 등 서방 열강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조치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밀입국을 통한 감염병 확산만 낳는다고 비판했다. 국경 봉쇄는 (얼마나) 효과적일까?

분명히 북한 등 가난하고 보건의료 기반 시설이 충분치 않은 나라들에서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점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비상 사태 선포에 촉진을 부리고 국경 폐쇄도 필요치 않다고 한 것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을 크게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2017년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선출될 당시 중국은 그를 지지하며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지배자들의 대응은 이 체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잘 보여 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경 폐쇄가 아니라 필요 물자와 의료진 지원이다. 또, 서구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방역 기술과 자원, 보건 인프라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서구 국가들이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투자한다면 국경 폐쇄 없이도 감염병 확산을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지배자들의 인종차별적 선동은 그 나라들에서 중국인은 물론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영국에서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중국인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에서는 길을 가던 아시아계 여성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인플루엔자로 수천~수만 명이 죽지만 무상 예방접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는 국가 건강보험이 없다. 유럽연합의 긴축 정책으로 그리스 등 일부 나라들에서는 평균 수명이 단축되고 보건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각종 감염병 환자가 대폭 증가했다.

홍콩 병원 노동자들도 국경 폐쇄를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생계를 위해 중국 본토와 홍콩을 오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고려하면 이 요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홍콩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은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공무원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명령했다. 마스크 재고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정작 자신은 다른 기자회견에 마스크를 쓰고 나와 더욱 원성의 대상이 됐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진용 마스크와 방호복 등이 부족해 실제로 커다란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 노동자들이 홍콩 정부에 ‘5대 요구’를 제시한 것을 보면 자신을 스스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홍콩 항쟁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중국 정부는 대신 사람을 통제하려고 도로 봉쇄 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된 데다 곧 춘절 휴가가 끝나 수많은 사람이 직장으로 돌아오면 이런 식의 봉쇄는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줄타기 곡예에 가깝다. 방역 기술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환자들을 치료할 시설과 인력이

준비돼 있지 않다. 700여 명의 우한 교민을 공무원 연수 시설에 수용한 이유다. 이를 반대한 주민들이 아니라, 집권 이후 공공병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한다. 우한 교민들을 공공병원에 입원시켰다면 이런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18명을 넘어가고 있는 환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 접촉자들을 격리할 병실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국종 의사 논란에서 보듯 돈이 안 되다며 중증외상 환자 입원조차 거절하는 민간병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접촉자를 수용하려 할까? 한줌도 안 되는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엄청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태국 등 중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감염된 환자가 들어오고 3차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막는 조치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자가 격리’ 같은 멍청한 짓을 중단하고 검역 인력과 격리 병상을 대폭 확보해 의심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당연히 그 비용과 생활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총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 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할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이정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2월 3일 중국에서 설 연휴가 끝난 뒤 개장한 상하이종합지수는 7.7퍼센트 폭락했다. 하루에만 440조 원이 증발했다. 환율도 1달러당 7위안을 넘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시가 총액이 3900조 원 줄어들었다.

중국 증시의 '블랙먼데이'는 중국 경제의 위축 또는 추락 가능성을 보여 준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6.1퍼센트로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의 이윤율 저하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 여파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를 단기간에 잡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에 가해질 연쇄적 타격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 있다.

2월 5일 현재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2만 4500여 명으로 2003년 사스(급성 호흡기증후군) 때보다 3배나 많다. 중국 정부는 감염자 확산을 막으려고 설 연휴를 2월 9일까지 연장하는 등 인간 힘을 쓴다. 그러나 일일 감염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월 31일 1982명에서 2월 5일 3912명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를 조기에 잡지 못한다면 생산이 감축되고 민간소비도 위축될 것이다. 또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틴은 중국이 3개월 내에 바이러스를 통제하면 경제성장률은 0.8퍼센트포인트, 신종 코로나 사태가 9개월간 지속된다면 1.9퍼센트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스가 발병했을 때 중국의 200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2퍼센트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물론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및 민간의 부채가 많아 2009년 경제 위기 때처럼 GDP의 30퍼센트 규모를 투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생산적 투자보다는 또 다른 자산 거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신종 코로나가 중국에만 한정된 현상이라고 안도할 수만은 없다. 생산과 소비가 많이 세계화돼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 원인이지만 우한은 제너럴 모터스와 혼다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이 밀집해 있는 자동차 제조업 중심지다. 우한뿐 아니라 광저우, 선전, 상하이, 쑤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들에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공장이 포진해 있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65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이 1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중국산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공급망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전염 우려 탓에 한산한 국제공항



아이폰의 90퍼센트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은 이번 사태로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10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차질 효과는 한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의 재고가 바닥나면서 쌍용차 평택공장이 문을 닫았다. 현대차도 7일부터 국내 모든 공장 문을 닫는다. 부품사도 연쇄적으로 휴업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생산 중단이 길어진다면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신종 코로나 확산이 멈춘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2003년 사스 때보다 더 크다. 2003년 중국이 세계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퍼센트였지만 2019년에는 16.3퍼센트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사태가 악화하고 장기화하면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를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둔화해 거의 '정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경제적 불황을 초래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연간 2퍼센트 성장하고 유럽과 일본은 겨우 1퍼센트 성장한다. 브라질, 멕시코,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공, 러시아 같은 주요 신흥 경제들도 기본적으로 정체 상태. 인도와 중국 같은 거대 경제도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면 이것이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시진핑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것 때문에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우한시장 저우셴왕은 중국중앙ทีวี(CCTV) 인터뷰에서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중앙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진핑이 하급 관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진핑이 몸소 나서 진두지휘하지 않고 리커창을 내세우는 것도 대중적 불만을 사고 있다. 1998년 중국 전역을 휩쓴 대홍수 때 당시 부총리였던 원자바오가 양쯔강 뚝을 사수하기 위해 현장에서 메가폰을 잡고 지휘하는 모습이 중국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일부 사람들은 이를 훌륭한 연기라고 생각한다.) 반면 2003년 사스가 유행할 때 군부 실세였던 장쩌민은 "자라가 등껍질 속에 머리를 숨기듯"(당시 중국 대중의 표현) 상하이에 숨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중국인들이 저우셴왕을 비난하지만 그 화살이 언제든 시진핑에게 향할 수 있다.

용어 설명



티핑 포인트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던 어떤 현상이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예기치 못한 일들로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그 시점.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낮아졌다는 말이 나오지만, '대폭 인상' 요구 자체는 변함없다.

1월 16일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공동 기고한 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다. 이 글에서 그들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1월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9000명이 4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날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한국 재향군인회장을 만나 협상 타결 지연 때문에 "전투준비태세 유지가 우려된다" 하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의 4월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그 자체로 문제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자본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 군대이자, 일본을 비롯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데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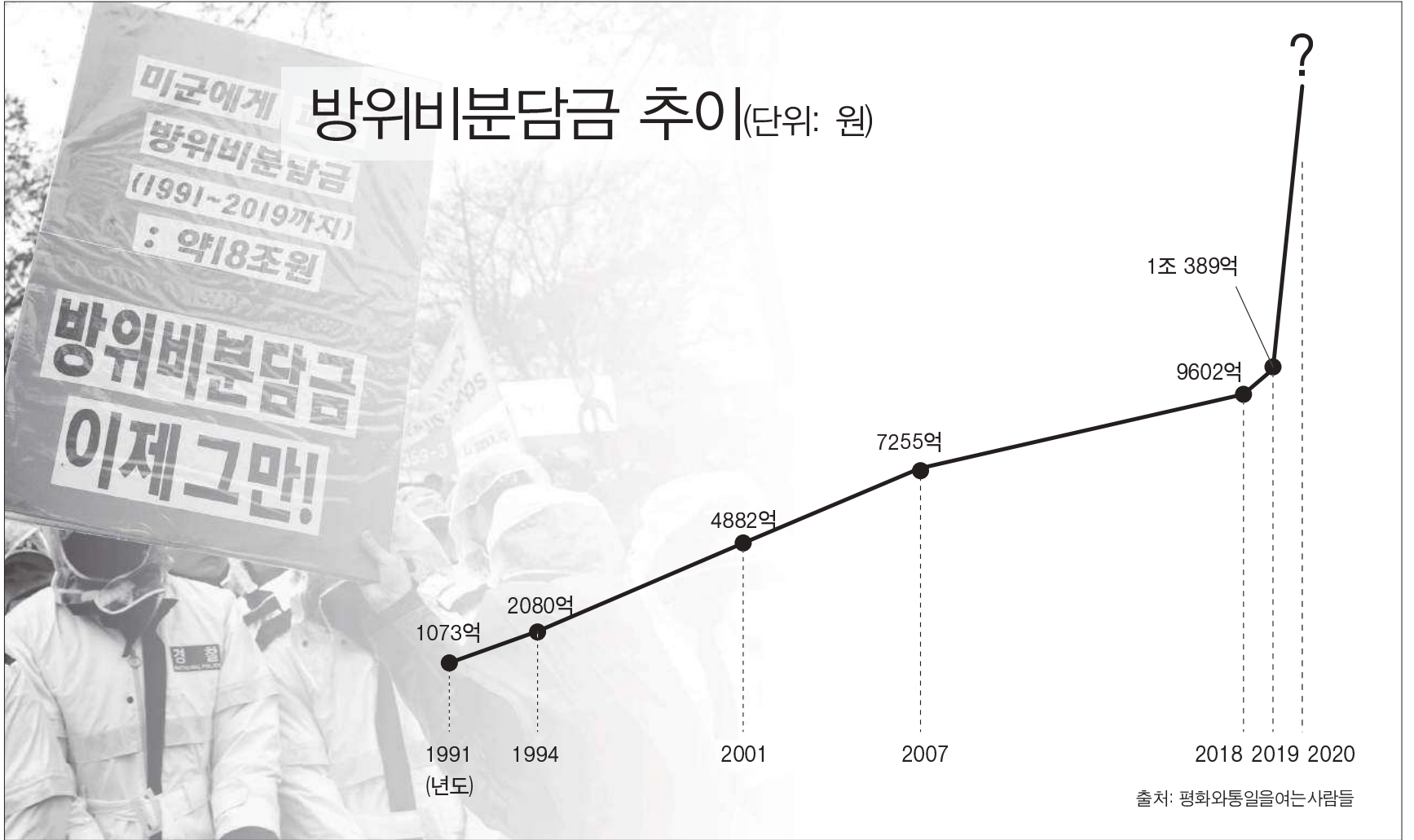
전 前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주한미군 유지에 회의적인 트럼프에게 "해의 주둔 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 하고 말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밥 우드워드가 쓴 <공포>에 따르면 매티스는 "우리는 [주한미군] 2만 8500명의 병력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확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한국을 "강력한 보루로 확보할 수 있다"고 트럼프에게 말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불안케 하는 한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경쟁에 한반도를 휘말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민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돈과 군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것은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와 관련 있다. 냉전이 끝날 무렵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냉전 초기에 견줘 많이 줄어들었다. 즉, 그만큼 경쟁국들이 미국 경제와의 간극을 줄였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다른 경쟁



국들을 압도했지만, 미국 지배자들은 패권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점차 부담스러워했다.

냉전 시절에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동맹 체제 안으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섭하면서, 그 국가들에게 경제·안보 면에서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줬다. 물론 이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자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세(예컨대, 신자유주의의 확산, 나토의 동유럽 진출, 2003년 이라크 전쟁 등)를 펼치는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나누자고 적극 요구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91년 이라크를 공격하면서(걸프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전쟁 비용 500억 달러 중 36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개입을 실행하고 남들은 그 비용을 치른다."

미국은 한국에도 돈과 군대를 요구했다. 1989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주한미군 경비로 4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1990~1991년 걸프전이 일어나자 한국은 군대를 파병하고 5억 달러를 전비 분담금으로 냈다.

1991년 미국과 한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정식 체결했다. 그 후 방위비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이전 정부들보다 훨씬 강하게 동맹국들에게 '안보 분담'을 요구한다. 안보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말이다.

이런 변화는 단지 트럼프 개인의 성향만이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전보다 더 깊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계 주요 지역(북미, 유럽, 동아시아, 중동)을 모두 통제해야 하는 처지에서, 오늘날 미국은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는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된 한국 청해부대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을 유지하는 데서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군사적 우위를 지킴으로써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 위협에 맞서는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에 기대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라고 밝힌다.

그래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 밖의 미군 비용도 한국에 요구한다. 미군 순환 배치, 역외 훈련 비용이 포함된 이른바 '준비태세' 항목을 SMA에 신설해, 그 비용도 한국이 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연관지어 보면,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분명하다. 즉, 한국이 돈과 군대를 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이 한국 지배자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

진보·좌파 다수는 옳게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미국 패권을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는 게 부당하고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미국의 강요"임을 강조한다. 즉, 이 문제가 미국과 한국이 "주종 관계"임을 보여 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양국 정부 간에 인상 폭을 놓고 견해차가 불거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나름의 이해관계를 추구해 왔다. 즉,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도 이익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도 한국 지배계급의 한 정치 분파답게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축"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액수는 협상 정전이지만 방위비분담금 자체는 동맹 강화를 위해 치를 만한 비용일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대폭 인상(2019년, 8.2퍼센트)에 동의해준 바 있고, 지금도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

준의 분담"을 얘기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너무 부각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폭을 낮추되 미국산 무기 구입 비용과 국방 예산을 늘리는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비롯한 "책임국방"(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이라고 불렀다)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의 '안보 분담'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국방'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 "초당적 대처"를 호소하는 게 부 적절한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가 친제국주의적 선택을 할 것임을 경고하고 그 선택에 반대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파병반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각계공동행동

일시 : 2020년 2월 15일(토) 오후 5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

(집회 후 미국대사관 행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최: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제안 중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주류 정치인들을 누르고 샌더스가 떠오를까?

김준호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대중의 변화 염원이 힘껏 드러나고 있다.

2월 3일 아이오와주(州)에서 열린 민주당 코커스(당원대회)*(7면 하단 참조)는 민주당 주류 정치인 참패의 현장이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류 언론들이 전폭 지원한 조셉 바이든이 4위를 해 참패했다. 반면 “정치 혁명” 슬로건을 내건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샌더스는 3만 2772표(26.2퍼센트, 2월 5일 오후 6시 현재)를 얻어 바이든의 갑질기량 득표했고, 민주당 주류가 선호하는 또 다른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3위)보다 약 7000표 더 득표했다. 선거를 감독한 민주당전국위원회(DNC)가 구설수를 무릅쓰면서까지 개표 결과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 주류 후보 참패의 후과를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몸부림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 매파로 유명한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인 1999년 코소보 폭격 지지에 앞장섰고, 2003년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다. 최근에도 바이든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더한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바이든 지지는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 높다. 그가 미국 권력층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 온 정치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런 권력층 대변자면도 때문에, “본선 경쟁력” 운운하는 언론의 찬사가 무색하게도 바이든은 참패했다.

샌더스 다음으로 많이 득표한 피터 부티지지는 인디애나주 소도시 시장 출신으로, 커밍아웃한 젊은 동성애자이다. 이번 코커스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성소수자 천대에 전격이 난 사람들 중 일부가 부티지지에 투표한 듯하다.(부티지지는 샌더스보다 1000표 이상 적게 얻었는데도 민주당의 비민주적 경선 규칙 때문에 대의원 선출 표를 가장 많이 행했고, 그 결과 샌더스와 동수의 대의원을 행길 수 있었다.)

그러나 부티지지는 대기업들과 유착돼 있는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이고,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지지하는 등 공약에서 기성 후보들과 다를 바 없는 자이다.

변화 열망의 진정한 초점은 버니 샌더스다. 샌더스의 출마 선언 24시간 만에 100만 명이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한 일, 고액 기부자 한 명 없이 순전히 소액 후원금만으로 2019년 4사분기에 선거비용 모금 신기록을 경신한 일 등은 샌더스 열기를 잘 보여 준다.

샌더스의 공약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에 사는 대중의 진보적 변화 염원을 반영한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은 ‘메디케어 포 올’(전국민 단일건



2월 1일 아이오와에서 열린 샌더스의 유세 콘서트. 샌더스 지지자를 통해 표현되는 변화 염원은 아래로부터의 행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강보협), 연방 최저시급 2배 인상, ‘그린 뉴딜’로 기후 재앙에 적극 대처하기,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이다.

샌더스 선거 운동은 미국 정치의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 아이오와 코커스 입구 조사에서 참가자 57퍼센트가 “민간의 의료보험을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으로 대체하기”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다(로이터), 이는 샌더스가 ‘메디케어 포 올’을 핵심 공약으로 부각시킨 것의 영향이다. 뒤이어 22퍼센트가 기후 재앙 대응(그린 뉴딜)을, 17퍼센트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는데, 이 역시 샌더스의 주요 공약들과 관계있다.

더구나 샌더스는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후보다. 샌더스는 지난해 미국 GM 노동자 파업과 교사 파업 집회들에 참가해 파업 지지 연설을 했다. 샌더스는 최근 트럼프의 이란 전쟁 위협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히 청년들과 차별받는 인종 집단 사이에서 샌더스 지지가 두드러지게 높다. 미국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한 1월 26일 여론조사에서 샌더스는 43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2위인 엘리자베스 워런(21퍼센트)의 갑질 이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샌더스는 사상 최초로 열린 무슬림 당원 모임에서 96퍼센트, 중남미계가 다수인 당원 모임에서 94퍼센트 지지를 얻었다.

열망

기성 정치권과 언론들은 샌더스를 맹공격해 왔다. 그들은 샌더스의 행보와 그를 향한 대중의 지지를 철저히 외면했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거듭했다.

그중 가장 비열한 것은 샌더스가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난이다. 2019년 12월 미국 보수 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샌더스 선거운동이 “사상 최고로 유대인 혐오적”이라고 비

난했는데, 샌더스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비판했다는 게 이유였다. 가족들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희생된 유대계 정치인에 대한 이 터무니없는 비방을 기성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냈다.

이런 거짓 비방에는 샌더스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실 샌더스의 ‘정치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대중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혁명적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활용해 개혁을 달성하는 것(사회민주주의)인 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민주당 주류가 내세운 후보들은 대중의 염원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

이번에 참패한 바이든뿐 아니라, 샌더스의 대항마인 양 조병방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자’ 워런도 마찬가지다. 워런은 샌더스의 ‘메디케어 포 올’, 대학생 등록금 부채 전액 탕감 등의 공약을 그대로 가져다 썼지만,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약에서 후퇴했다. “뺏속 다 털어서”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에 맞서 중도 표심을 잡을 “본선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라면 누구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차악론).

그러나 정치적으로 버니 샌더스와 친한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미국에는 좌파 정당이 없다. 민주당은 기껏해야 중도 정당이거나, [공화당처럼] 보수 정당일 뿐이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본가 계급에 기반한 정당으로, 이제껏 노동자를 공격하고, 인종차별을 용인하고 부추겼으며, 제국주의적 호전성을 발휘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그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주도한 것도 민주당 정부였다.

그럼에도 샌더스의 선거 도전은 트럼프에 맞서 좌파적 대안 쪽으로 견인됐었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거듭했다.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샌더스 열풍은 미국 사회의 변화 염원이 광범함을 보여 준다. 이런 열망이 노동자 대중의 행동으로라도 표출될 때 미국에서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빼고 누구든’(차악론) 관참을까?

한편, 같은 날 열린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의 귀환” 운운하며 97.1퍼센트 득표했다. 현직 대통령의 재선 출마라는 점을 감안해도 두드러진 몰표였다.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힘을 찬미하며 미국의 희망찬 앞날을 선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계급의 적이자 호전적 제국주의자이다. 트럼프가 말하는 “희망찬 앞날”에는 노동자 등 서민층은 없다. 트럼프의 부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부위를 고무한다.

이런 트럼프에 전력이 난 사람들의 일부는(심지어 좌파 일부도) 트럼프에 맞서 중도 표심을 잡을 “본선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라면 누구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차악론).

그러나 정치적으로 버니 샌더스와 친한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미국에는 좌파 정당이 없다. 민주당은 기껏해야 중도 정당이거나, [공화당처럼] 보수 정당일 뿐이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본가 계급에 기반한 정당으로, 이제껏 노동자를 공격하고, 인종차별을 용인하고 부추겼으며, 제국주의적 호전성을 발휘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그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주도한 것도 민주당 정부였다.

한 지배계급 정당(공화당)이 싫다고 다른 지배계급 정당(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같으니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

▶ 7면으로 이어짐

프랑스 파업

정부 탄압에 맞서 다시 전투성이 분출하다

찰리 김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2월 6일 프랑스에서 또다시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예정돼 있다.

지난주 파업에 들어간 소방관들이 시위집압부대(CRS)에 맞서 싸우는 광경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를 본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환호를 보냈다.

소방관 약 1만 명은 연금 개악과 그 외 다른 문제들에 항의하러 파리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방호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공공연히 무시하며 소방관들은 장비를 갖춰 행진에 나섰다.

소방관 노조 대표단은 정부를 만나고 왔지만, 정부가 아무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말을 들으니 속이 뒤집어집니다.” 소방관 토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에 항의해 파리 외곽 순환도로를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우리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섬광탄과 물대포를 쓰고, 최루가스를 뿌리며, 트럭을 동원해 장벽을 세웠다. 한 소방관이 근거리에서 머리에 [경찰에 쏜] 고무탄을 맞았다.

방어벽

그러자 소방관들은 트럭 장벽을 뚫어 냈고 경찰과 몇 시간 동안 전투를 벌였다.

노조의 전술은 연금 개악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일정에 맞춰 하루 집중 행동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무기한 파업이 끝나면서, 정부는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월 23일에 파업에 합류한 파리 인근 쓰레키 소각 처리 시설 노동자 40여 명에게 “업무 복귀 명령서”가

날아오고 있다. 일터로 복귀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위협이다.

그러나 새롭게 전투성이 분출하는 징조도 있다.

고등학교와 교사들은 새로운 시험 제도(E3C)에 반대하는 대규모 운동에 나서고 있다. [학교] 봉쇄와 점거, 파업으로 학교 수업 곳에서 시험이 취소됐다.

노조 평화협원들의 투지도 의심할 여지없이 확고하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안 철회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협상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정부 대표단과의 연금재정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전에는 그런 협의 자체를 비난했는데 말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90호 / 번역 김지혜



2월 3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노동자들. 기층 노동자들의 투지와 저항을 제대로 담아낼 정치와 조직이 필요하다

▶ 6면에서 이어짐

는 것과 같은 일이다.

대중의 변화 염원의 구심이 될 진정한 대안은 차악론이 아니라 독립적 진보 정치에서 나올 것이다.(관련 기사: ‘미국 민주당이 진보진영이 참조할 모델인가’) 그런 점에서 20세기 초 유진 뎀스의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뎀스는 전투적·급진적 전쟁 반대 운동과 노동운동으로부터 등장해 독자적 후보로서 강력한 선거적·정치적 도전을 하고 미국 사회당을 창당했다.

이 기사를 쓰는 2월 5일 현재 미국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탄핵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 트럼프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 샌더스 열풍 덕분에 대중운동이 고무되고, 결국 민주당 바깥에서 아래

로부터의 대중운동의 구심이 생겨 날 때 그런 도전은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

민주·공화 양당은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7월 13~16일, 공화당 전당대회는 8월 24~27일 열린다. 양당은 전당대회 전에 각 주를 돌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대의원을 뽑는데, 방식은 주에 따라 코커스(당원회, 당원만 투표)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비당원도 투표 참여 가능)로 나뉜다. 사·군벌로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가 사·군에 활동된 주 대의원 선출 표를 모두 가져간다. 구제적 투표 과정은 각 주의 선거법과 각 당의 당규에 따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소모적 브렉시트 논쟁이 아니라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나는 인간의 행동을 비롯거나 한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직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위대한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가 1677년 세상을 떠

나면서 미완성으로 남긴 <경치 논고> 서문에 남긴 말이다.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처하는 최선의 태도이기도 하다. 브렉시트는 1월 31일 시작됐지만 올해가 다 갈 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브렉시트는 영국 사회를 양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정치 체제도 마비시켰다. 좌파도 침체하게 분열했다.

이 분열은 현재 진행형이다. SNS에서는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좌파들이 브렉시트를 렉시트[좌파적 유럽 연합 탈퇴 운동] 탓으로 돌리며 그 영향력을 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반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운동은 작고 미약했다. 한편 렉시트 지지자들은 노동당의 총선 패배가 잔류파 탓이라고 비난한다.

나는 양편이 서로 비난을 퍼붓는 쟁점에 대해 명확한 나름의 견해가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런 논쟁은 이제 핵심이 아니다. 2016년 6월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지리멸렬하게 이어진 정치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다.

그 결과란 [보수당 총리] 보리스 존슨이 이겼다는 것이다. 존슨의 승리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를 그저 오랜 시간 억거른 세계관을 드러내는 어리봉방한 기회주의자라 여겼지만, 존슨은 그 이상이었음을 입증했다.

존슨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교착 상태를 이용해 총리직을 거머쥐고, 야당들을 움직여 조기총선을 실시하도록 하고서 총선에서 집요하게 “브렉시트 완수”를 공약해서 압승을 거뒀다.

그 탓에 영국에는 역사상 가장 우익적인 보수당 정부가 들어섰다. 마거릿 대처의 발목을 잡고 결국 쏘아내기가 지했던 그 옛날 친유럽 “중도파”는 보수당에서 축출됐다. 존슨 정부는 유럽연합의 무역 규정 체제(유럽연합 시장 접근을 위해 유럽연합의 환경·노동 등의 규제를 따르는 것)를 거부함으로써 이전 보수당 정부가 구상했던 그 어떤 브렉시트보다 훨씬 더 강경한 브렉시트를 향해 가고 있다.

존슨이 아주 온건한 종류의 “일국 보수주의”[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보수당 정치 정책을 곧 선보일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듯이 존슨과 그의 제

무장관 사지드 자비드는 각 부처에 예산을 5퍼센트씩 삭감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여전히 건국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재정을 확보해 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유럽단일시장에서 파괴적으로 단절하면서 생길 혼란에 대비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가까운 시일에 벌어질 일들이다. 즉, 모든 좌파가 패배를 겪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를 되돌리려고 제2국 민투파 촉구 운동을 벌이던 좌파는 패배했다. 그러나 진보적인 브렉시트를 주장한 우리(노동당에서 허용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동참했던 제리미 코빈도 포함) 또한 패배했다.

지난 보수당 정권 10년 동안 지독하게 고통받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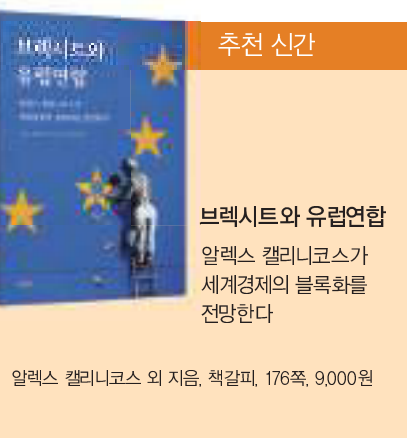
우리는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그럴 것이다. 우리는 훨씬 심각한 패배도 겪어 봤다. 유럽연합과 단절함으로써 존슨은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존슨의 운은 바닥날 것이다. 어쩌면 꽤 빨리 바닥날 수도 있다.

그러나 좌파가 다시 일어하려면 신중하고 냉철하게 사고해야 한다. 우리가 왜 졌는지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보수당 우파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좌파적인 지도부가 이끈 노동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를 곰곰이 봐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브렉시트도 중요했지만, 브렉시트 지지가 우세했던 노동당 선거구들이 왜 보수당으로 넘어갔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원인이 더 뿌리깊고 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학 연습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보수당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기후 재앙 가속화가 임박한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 상이한 좌파 세력들은 분열할 이유보다 단결할 이유가 더 많다.

그저 손을 맞잡고 도원결의하자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려면 의견 충돌과 논쟁은 피할 수 없다. 아마 노동당이 가야 할 길을 둘러싸고 특히 그럴 것이다. 명료함은 좌파 간의 합의가 아닌 논쟁과 쟁투 끝에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공방전은 이제 지루하고 헛도는 소모전이 되고 있다. 전진해야 할 때다. 우리에게 다쳐서 험난한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90호 / 번역 이원웅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타다 VS 택시’ 논란에서 정부는 택시업계에 일단 양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 이익 쟁거 주기도 살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3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 완화 입법이 지연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의 임시허가를 연장해 주거나 기존 규제 법령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현행법상 위법/범의 사업이라도 일단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1년간 195건을 승인했다. 이 중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 충전소를 인구 밀집 도심 지역에 설치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하는 것이다.

올해는 훨씬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Q. 용어설명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란 마치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모래판처럼, 기업들에게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풀어 주거나 유예해 자유롭게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에게는 이윤 추구의 자유를 주면서,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두려는 정부

를 약속했다. 이들 중 적잖은 수가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다.

심지어 정부는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를 부르짖는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 심사를 맡긴 것이다.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게다가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얼마 전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판매하고 정부 보유 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활용이 관건인 플랫폼 기업들은 특히 돈벌이에 날개를 달 수 있다.

발부리에 차이는 근로기준법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이라며 칭찬해 왔다.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신흥 기업(스타트업)을 가리키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우아한 형제, 쿠팡, 위메프 등이 포함된다. 이 기업들은 모두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위메프)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니콘 기업’의 뿔에 받쳐 고통받는 플랫폼 노동자는 안중에 없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가사노동을

중개하는 플랫폼인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이 직접고용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했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부여)

이는 최대 30~5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들을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짓이다.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해 왔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이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니고 중개해 줬을 뿐이라며,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근무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원할 때, 달리고 싶은 만큼만”(배달의민족), “자유로운 업무시간”

(쿠팡이츠) 등.

하지만 이것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림막이다.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업의 통제와 관리 속에서 일한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하게 일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디지털 특고’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2020년 1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약 8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일주일 동안 평균 5.2일, 하루 평균 8.22시간 일했다. 다른 노동에 비해 결코 더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화물 운송은 하루 평균 13시간,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는 9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다는 말과 달리 약 64.2퍼센트가 플랫폼 노동만 하고 있다.

또, 배달 업체나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꿀’을 거부하는 빈도가 잦으면 불이익을 준다.

“소비자 불만이 들어오거나 별점을 낮게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진상’ 손님도 다 참아 내야 해요. 기업들도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시간대와 적게 필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급을 통제해요.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한다는 건 없는 거죠.”(대리운전 노동자)

‘혁신’ 기업들이 규제 완화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날뛰 때, 노동자들의 조건은 짓밟히고 있다.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김승주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대형 재난 등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마감 압박, 공사 기간 지연, 대량 리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로와 야간 노동에 심신이 병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대한 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컴퓨터 앞 ‘노가다’

마감에 쫓겨 떠밀리듯 하는 초과 노동은 IT 노동자들에게 익숙한 고통이다. “주 52시간제 이전에는 일상이 특별연장근로”였다고 말할 정도다.

IT 노동자들은 새해나 어린이날, 휴가 시즌이나 이벤트 기간 또는 신제품 출시, 게임이나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을 마감해야 하는 시기 전후로 집중적으로 초장시간 노동을 한다.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마감 기한이 말도 안 되게 촉박한 계약을 따 오기 때문인데, ‘날짜부터 박아 놓고 노동자를 쑤셔 넣는 식’이다.

이 시기에는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서 주 70~100시간 노동을 연달아 하는 일이 벌어진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동자를 “같이 넣어 ‘오드득’ 소리가 난다”는 의미에서 ‘크런치 모드’라고 한다.

“주 52시간제 도입 전까지는 주당 100시간 일하는 것도 다반사였죠. 수당도 없었고요. 짧으면 1~2주부터 길게는 두세 달까지 그렇게 일했습니다.”(S게임업체 노동자)

“주 70~80시간으로 두세 달 일하고 일주일 쉼 뒤 다시 크런치 모드에 돌입한 적도 있어요.”(N게임업체 노동자)

어처구니 없게도 IT 업계에서는 밥먹듯이 야근을 해도 수당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는 연봉 계약을 할 때 수당을 미리 포함시킨다는 개념인데, 실

제로는 무제한 초과 노동을 공짜로 시킬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한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로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는 IT 노동자가 약 77퍼센트에 달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에는 70퍼센트가 시간외근로수당을 못 받았습시다. 지난해부터 수당을 받는데 임금이 30~40퍼센트 인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곽창용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노동조합 사무국장)

아예 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부당하게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고 싸우고 있어요. 연장근로 사실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PC 로그 기록을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최근 3개월 기록까지만 남도록 설정돼 있더라고요.”(안종철 한국오라클노동조합 위원장)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 업계 일부에서 노조가 생긴 뒤 포괄임금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규모가 작고 노조가 없는 다수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강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확대로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되면 살인적인 ‘공짜 야근’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지만 무노조·취약노조 사업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개인이 회사와 상대하면 사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노동자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해요.”(S게임업체 노동자)

이렇게 노조가 없거나 취약한 곳에서 조건이 공격받기 시작하면 노조가 있는 곳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단협에 명확한 제어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들이 그 틈을 파고들거나, 특별연장근로가 시행된 타 업체의 사례를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기가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규제하라

고부가가치 산업인 IT 회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는 동안 노동자들은 건

강과 목숨을 위협받았다.

2016년 넷마블에서는 1명이 자살하고 2명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연사하는 죽음의 행렬이 일어났다. 당시 넷마블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야근한다는 응답이 48퍼센트에 달했다.

수면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자살 충동도 일으키는데, 게임 노동자의 자살 시도 경험은 50명당 1명 꼴로 전체 국민 평균보다 5배 높다(2012년 기준).

그런데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는 “기업들이 기로에 서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개인의 일할 자유를 빼앗는다”며 핏대를 세웠다.

그러나 IT 기업주와 정부가 말하는 자유란 “제발 집에 좀 보내 달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붙잡아 놓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착취할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하고 자본가들의 이윤 보장에만 혈안이 돼 있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을 운할 자격이 없다.

정세균 총리의 목요일대화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운영위원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일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일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일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1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파탄났다. 탄력근로제 확대안 ‘합의’ 과정은 경사노위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도구일 뿐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IL.O 기본협약 비준 좌절은 경사노위가 시간을 끌면서 후퇴를 강요하는 기구임을 보여 준 또 다른 사례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는 책임 전가일 뿐이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했다면 알량한 차악안에 합의하는 배신적 타협을 강요받았을 것이다.

그런 타협을 거부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계층(여성·비정규직·청년) 대표 3인이 겪은 수모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계층 대표 3인이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반발하자 경사노위는 그들을 해촉해 버리고 물갈이를 한 뒤,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통과시켰다.

총선 환심 사기

1기 경사노위가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달리 ‘도로 노사정위’로 막을 내리자, 경사노위 2기가 출범했음에도 별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자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희생시키는 펄프질의 일환으로 스웨덴 목요일클럽 ‘모델’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동운동의 일각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사노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핵심은 산별과 지역 차원은 물론 중앙 단위에서도(경사노위가 아닌) 사회적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목요일대화도 “제안이 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의 기대를 잃은 것은 단지 경사노위 운영 파탄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라는 더 큰 맥락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바꾸거나 새 틀을 만든다고 해서 그 난점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애초 사회적 대화 참여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안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다. 최저임금 개악이 거듭 추진됐고, 주 52시간제도 시행 유예와 연장근로 인가사유 추가로 무력화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도 철



사진 출처: 청와대



사진 출처: 저자

말만 새롭지 노동자 양보 강요 알맹이는 그대로 친기업 본색 노골화하며 노동자 뒤통수 쳐 온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2019년 1월 기업인과의 대화(위), 2018년 6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아래)

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후퇴를 멈추지 않고 ‘모델’만 바꿔 사회적 대화를 제의하는 것 자체가 대화의 기만적 성격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싶어 것이다.

하나는 총선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자,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 줌으로써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다.

양보 압박

다른 하나는 총선 후 본격화될 반노동적 정책 추진에서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고 양보를 얻어 내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성장동력 저하와 양극화, 인구절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양보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런 문제들

(성장동력 저하와 양극화,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파격적인 기업 투자 지원, 규제 완화, 구조조정, 임금 양보, 단시간 일자리 양산 등이 그것이다. 이런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세균 총리는 특히,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그는 이를 위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양보와 협력”을 목요일대화에서 압박할 생각이다.

그러나 “양보와 협력의 정신”으로 “성장동력 저하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계급을 떠나) 모두에게 이롭다는 주장은 기만일 뿐이다.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이 강요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시 극복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그 결실을 나누지 못한다.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 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

리해고와 파견근로 법제화 같은 양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재벌은 더 거대하고 부유해진 반면, 비정규직과 빈곤층은 더 늘고 더 가난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 모델로 애초에 제시한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은 이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다. 네덜란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여성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를 수용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득을 보지 못했다. 시간제 일자리와 저임금층 증가, 여성 빈곤 확대로 노동계급의 처지는 더 나빠졌다.

번지수 틀린 모델

문재인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은 스웨덴에서 목요일클럽(노·사·정 만찬 모임)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노·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스킨

십, 대화, 참여 등을 그 비결로 꼽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1946~1969년 스웨덴 목요일클럽이 다소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 장기 호황이었다.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산업 기반이 손상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였던 데다 유럽 재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전후에 탄탄한 경제 성장을 구가했다.

이런 경제 상황 덕분에 스웨덴 자본가 계급은 노동계급에 기꺼이 주요 개혁(의료, 교육, 주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은 이윤의 일부를 제공해 노동계급을 포섭하고 산업 평화를 얻는 것이 경제 성장(공, 자본 축적)에 더 이롭다고 봤다. 후발 산업국인 스웨덴은 1930년대 말까지만 해도 노동자 투쟁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었고,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워 러시아 혁명의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 경제가 확장되는 조건 덕분에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저임금층의 임금 인상)과 자본가 계급에게도 이익인 조치(특히,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가 맞물려 진행될 수 있었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은 임금 통제(고임금 노동자 임금 억제)라는 이득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연대임금 정책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었다. 임금 억제와 산업 평화가 지속되면서 막대한 이윤을 쌓은 기업들은 더 거대해졌고, 노동자들 편에서는 불만이 쌓였다. 결국 1970년대 초 장기 호황이 끝나면서 노동자 투쟁이 증대했고, 노·사·정 동반자 관계에 균열이 시작됐다.

개혁을 위한 투쟁

제2차세계대전 이후 25년 넘게 지속된 장기 호황과 유럽을 향한 수출 시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라는 특수성이 결합돼 가능했던 목요일클럽 모델을 오늘의 한국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나 속임수이다. 노·사·정이 만나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하라는 주문이 ‘상식’이 된다. 노동자 편에 서고자 하는 개혁주의자들도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결국 노동자 양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지금, 여기(경제 침체와 모순 많은 한국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에 기대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에도 작더라도 진정한 개선을 가져온 것은 바로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이었다. 사회적 대화 기구들 안에서는 공허한 말이 오가고, 시간 끌며 후퇴와 양보를 강요받는 일이 반복됐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새 ‘모델’이 아니라 효과적인 투쟁 모델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개적인 여대 입학을 지지하라

성지현

이 글은 2월 4일 발행된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

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を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만연한 사회에서 자신을 긍정하고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트랜스 여성 입학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중 일부는 더 적극적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반대하는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이 학생의 입학에 대해 입학처와 동문회에 항의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2월 4일에는 숙명여대를 포함해 여자대학 내 일부 급진 페미니즘 경향 동아리들이 트랜스 여성의 입학뿐 아니라 성별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트랜스 여성은 ‘진짜’ 여성이 아니고 남성일 뿐이라거나, 트랜스 여성은 ‘여성의 공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는 트랜스젠더 권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편견에 찬 주장들이다.

물론 입학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모두 트랜스젠더 혐오주의자라고 싸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성별 이분법이 뿌리 내린 사회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고, 학생들도 이런 사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편견을 갖고 트랜스젠더 학생을 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세상에는 타고난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트랜스젠더가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살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이분법적인 사회에서 고통받는다. ‘남자답지 못하다’ 혹은 ‘여성스러워 못하다’며 비난받거나 별종 취급을 받고, 사회적 성별 규범에 맞게 행동하기를 끊임없이 강요받는다. 까다로운 성별 정정과 비싼 수술 비용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꿈도 못 꾸는 트랜스젠더도 많다. 이들은 구직, 투표,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감내하고 숨죽이며 산다. 성전환 수술을 해도 여전히 차별을 겪는다.

트랜스 여성 입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 여성은 진짜 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인 페미니즘도 성별 정체성을 부정한다. 이런 견해는 성별 정체성의 의미와 성별 자기결정권(사람들이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할 권리)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별 정체성은 흔히 오해하듯이 단지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다. 트랜스 여성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로라 마일스는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내면적 인식(그 성을 부정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것 등)과 사회의 성별 규범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는 실재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즉, 성별 정체성은 생물학이나 사회의 성별 규범으로 환원될 수 없고, (고정 불변은 아니지만) 인간 내면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일부는(전부는 아니다) 만만찮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전환 수술을 한다. **성별 정체성은 개인의 핵심 자아 중 하나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트랜스 여성이 여성으로 길러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남성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신체를 바꿨어도 남성이라는 것이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은 다르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도 사회화 과정은 동일하지 않다. 특히, 부유한 여성들과 평범한 여성들이 살아온 과정은 매우 다르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자라온 경험과 그 호텔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성장 경험이 과연 얼마나 비슷할까?

무엇보다 트랜스 여성도 (그가 남들에게 여성으로 인식된다면) 여성 차별에 시달리곤 한다.

트랜스 여성이 ‘여성의 공간’을 위협하나?

일각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성들의 공간(여자대학, 여자 화장실, 여자 기숙사 등)’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며 두려움과 편견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근거 없는 편견일 뿐이다. 트랜스 여성이 여성 전용 공간에서 ‘시스젠더’(타고난 성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여성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반면 트랜스 여성이 남성 화장실 등을 쓸 수밖에 없을 때 폭력과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경우는 많다. (트랜스젠더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와 아무 상관도 없는 불법촬영이나 성범죄 사실을 자신들의 근거로 은근슬쩍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사실 그동안 여자대학 안에서도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의 사람들이 존재해 왔다. 트랜스 여성의 여자대학 입학 소

Q 용어설명

젠더퀴어 / 논바이너리

이분법적 성별 규정을 벗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성별이 남녀로만 나뉜다는 것을 거부하는 취지에서 사용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식이 널리 알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일 뿐인 것이다. 여자대학 안에도 남성인 교강사, 직원 등이 이미 대학 구성원으로 공존하고 있다.

물론 안전하고 더 좋은 공공장소와 서비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트랜스 여성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누구나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도 그 중 하나다. 이것은 당연히 돈이 드는 문제이고, 정부 · 기업 · 대학 당국이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트랜스 여성이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은 트랜스 여성은 남성이고, 남성의 생물학적 본성이 여성을 공격하고 차별한다는 급진 페미니즘의 견해와도 관련 있다. 하지만 여성 차별의 원인을 남성의 생물학적 본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 이런 견해는 생물학을 근거로 여자의 본분과 성격을 규정하는 보수적 견해의 거울 이미지다. 여성 차별은 남성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계급으로 나누는 계급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했다(자세한 설명은 본지 기사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시오).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는 대립되지 않는다

트랜스 여성을 여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성별 규범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랜스 여성들이 소위 ‘여성스러움’을 지향하는 게 여성 차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차별의 문제를 트랜스젠더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별 고정관념은 가족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고, 가족제도와 여성 차별적 관행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는 국가기구 · 기업 · 주류 언론 등 사회의 권력자들이다.

트랜스젠더 때문에 성별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트랜스젠더는 기존 규범과 충돌하기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실사 트랜스 여성이 ‘주류적 여성상’에 부합하려 애쓴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시스젠더’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 운동이 옹호해 온 가치다.

트랜스 여성의 권리와 여성 일반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트랜스 여성이 겪는 고통과 여성 일반의 고통은 연결돼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자들은 고정된 성 역할을 부추기고, 이분법적 성별 규범 틀에 사람들을 옥여넣으려 한다. 이는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타고난 성별만을 인정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은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과 규범에 저항할 가능성을 좁힌다.

법적 성별 변경은 더 쉬워져야 한다

여자대학의 일부 급진 페미니즘 경향 동아리들은 성별 변경에도 반대하며 법원이 성별 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국회가 성별 변경 불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이다. 타고난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이 달라 트랜스젠더들은 크게 고통받는다. 학교, 군대, 직장, 투표장, 화장실, 동사무소 등 많은 공간이 성별 이분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길 원한다.

한국은 2006년부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지만, 별도 법률이 없어 개별 판사의 판단에 좌우된다. 또, 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의 요건들이 너무 엄격하다. 특히, 많은 판사가 고비용이 드는 성기 성형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요구한다.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 여성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에 등록할 수 있을지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소수자가 정체성을 드러내면 차별과 멸시가 있으니 숨어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 굉장히 잘못됐다”고 일침을 놔다.

숙명여대 안팎으로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 동아리와 숙명여대 학생 ·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입학 환영 입장을 낸 데 이어, 지지하는 동문들의 목소리도 모이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길 바란다.

여성해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고 여성과 성소수자 모두의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미 영국, 아일랜드 등 많은 유럽 나라들이 법으로 성별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완화하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성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성별 변경이 훨씬 쉬워져야 마땅하다.

추천 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로라 마일스, 양효영 외 지음 | 정진희 엮음 | 책갈피 | 2018년 | 184쪽 | 9,000원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이정원

지난 1월 13일 노동부는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제로 개편+임금 연공성 완화”를 특별 중점관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본격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제 추진 상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경영평가 점수에 따라 기관장 평가, 성과급 삭감, 예산 불이익이 수반된다.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기업복지 삭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런 방식으로 강제했다.

문재인은 당선 초기 ‘이전 권력의 임금체계 변경 일방 추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역시 그 약속도 뒤집고 추진 방식조차 박근혜를 똑같이 따라 하고 있다. 기재부는 개별 기관들을 불러 시행을 압박하고 있다.

오죽하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조차 경사노위 논의 등 사회적 대화를 ‘패산’한 정부의 일방 추진에 당혹감과 우려를 표했다. 물론, 그는 임금체계 개악 필요성에는 문재인과 한목소리다. 다만 일방 시행 시 만만찮은 반발이 일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격하는 연공급제는 박근혜 정부도 표적으로 삼았지만,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 제대로 개악을 관철하지 못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불씨가 됐던 노동자 투쟁이 바로 성과연봉제에 반대한 철도 파업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금체계 개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제 침체가 오래 지속돼 온데다 올해 경제 전망은 지난해보다 더 나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임금 억제

직무급제 도입의 목적은 명백히 임금 억제에 있다.

정부는 “호봉제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호봉제는 과거 한국 자본주의 성장 초기에 사용자들이 미래의 (평생 고용과 연공급



임금체계 개악을 저지해야 2019년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전조함원 임·단협 교육에서 “직무급제 폐지”를 외치는 노동자들

제에 따른) 임금 인상을 미끼로 젊은 노동자들의 충성을 끌어내고 낮은 초임을 정당화하려고 도입했다. 기업주들은 청년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부려먹으며 이윤을 증대시켜 왔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빠진 자 과거에 기업주들에 유리했던 그 방식이 이제는 부담이 됐다. 더구나 1987년 투쟁으로 초임이 대폭 오르는 등 그동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시켜 왔기 때문에,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더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기업주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고 호봉제를 폐지·약화시키고 임금 인상을 억제할 다른 임금체계(직무급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직무급제 임금 개편이 임금 손해를 낳지 않는다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노동자들을 잘 속여야 한다는 것이지, 실제 불이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사례로 제시하는 직무급제는 직무 등급마다 임금 상한선을 정해 뒤 상위 직무 등급으로 승급하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서든 임금 인상이 중단된다. 직무 등급의 승급은 자동이 아니라 시험이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에 도입된 직무급제가 이렇게 설계됐다. 직무 등급 내 임금 상한선이 있고, 같은 직무 등급 내의 임금 인상은 성과 평가 비중을 가장 크게 반영해 개인별로 정하도록 했다.

2019년 직무급제가 도입된 한국석유관리원도 비슷하다. 이곳은 직무와 역할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률에 개인별 차등을 두었다.

두 기관 모두 등급 내 임금 상한선을 두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오르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는 기존 호봉제와 비교해 임금 상승이 대폭 제약되는 효과를 내게 된다.

또 성과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직무급제가 “이름만 바뀐 성과연봉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간질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장년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있다.

가령, 정부는 호봉제가 정규직에게만 이롭다며 직무급제야말로 비정규직에게도 이로운 ‘공정 임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직무급제(표준임금체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호봉제는 한사코 반대했다. 대신 전환된 노동자들의 업무(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에 적합한 “시장 가치”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평생 저임금을 고착

화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말이다.

또, 정부는 호봉제가 장년 노동자들만 위한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고 직급을 부여하는 직무급제가 청년 노동자들에게 이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가 청년 노동자들에게 이롭다는 주장은 사기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이유를 대며 성과연봉제를 추진했지만, 전체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실적 경쟁을 강화하고 사측 관리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며 노동자들을 줄 세우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해 성과 평가를 약화시키고 근속 승진을 도입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조건을 지키는 것이 훨씬 이롭다.

부분 개편 꼼수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부분에서 시작해 전면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일정 기간 임금을 보전해 주거나, 부분적 임금체계 개편(호봉 수를 줄이기, 성과평가에 연계해 호봉 차등하기, 성과급 비중 늘리기 등 이른바 ‘연공성 완화 방안’)을 먼저 하라는 것이다.

이런 조처들이 당장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피해가 적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이는 직무급제 도입으로 가는 과도기적 조치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 손실 보전은 ‘일시적 조처’여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하

기도 했다.

노동운동은 이런 꼼수를 경계하면서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땀에 구멍이 뚫리면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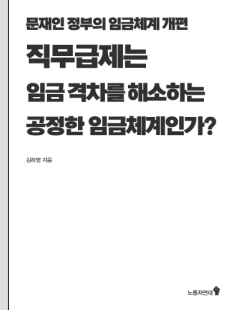
기존 임금체계를 지키는 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노동운동 내에 적지 않다. 하지만 일단 개악을 저지해야 그 힘으로 개선도 이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점에서 정부와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조의 임금 교섭권을 보장받는 기회로 삼자는 안이한 접근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사실상 일방 추진을 하고 나선 만큼, 공공부문 노조들은 시급하게 직무급제 도입 저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무급제 개편 논의 등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방침에 따라 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대노총 공대위 공조를 통해 이 논의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재부와 노동부가 버텨서 직무급제 개편 추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권 보장 약속 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데서 보듯,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임금 개악을 막을 수 없다. 이번 임금 개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 차원의 임금 개악 저지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

추천 소책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42쪽, 2,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 전문 PDF가 있습니다.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직장 □노조 □대학교 □종교단체 □기타)

회비약정액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정부가 책임을 지라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0년 1월 18일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정원

문중원 열사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은 서울로 상경해 장례도 못 치른 채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이 억울한 죽음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문중원 열사는 마사회가 '선진 경마'라는 미명 하에 기수와 말관리사 등 노동자들을 극단적 경쟁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유서에는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와 이를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 등 그가 당해 온 부당 대우와 만연한 비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런 현실을 벗어나려 조교사 면허를 따는 등 열심히 노력했지만 4년이 넘도록 조교사가 될 수 없었다.

기수들이 받은 처우는 매우 열악했다.

기수들은 말을 타고, 경주에서 순위 안에 들어야 소득이 높아진다. 기수들의 임금에는 경주 상금 비중이 매우 커, 경주를 뛰지 못하거나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낮은 소득에 시달려야 한다.

또, 부당한 해고와 부당한 지시에 시

달리고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취급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산재 문제도 심각하다. 경마공원의 연간 재해율은 약 14퍼센트로 전국 평균 재해율의 25배가 넘는다. 이조차 은폐된 산재는 제외된 수치다. 노동자들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마사회 노동자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했다. 2017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말관리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전체 말관리사의 34퍼센트가 우울수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죽음의 행렬도 계속됐다.

마사회는 기수나 말관리사가 조교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위선적인 책임 회피다.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는 원래 모두 마사회 직원이었다. 그런데 1993년 마사회는 '개인마주제'를 도입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말들을 팔아 버리고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와의 고용 관계를 해지해 버렸다. 이후 마주와 조교사가 위탁계약을 맺고, 말관리사는 조교사가 고용하며, 기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조교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됐다.

결국 조교사가 기수와 말관리사를 통제해긴 하지만, 그런 조교사를 통제하는 것은 마사회이고 기수와 말관리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 또한 마사회다.

마사회가 결정하는 상금의 항목과 규모에 따라 말관리사나 기수들의 소득이 결정된다. 또, 마사회는 면허 제도와 징계 권한으로 기수 면허 부여·갱신, 말관리사 채용에 관여한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문중원 열사와 그동안 억울하게 죽어 간 마사회 노동자들의 죽음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유족과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민주노총 열사대책위가 요구해 온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유족에 대한 사과 및 자녀 등 유족 위로 보상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외주화

문중원 열사가 죽음을 선택한 배경에는 공공부문에서 확대돼 온 외주화 문제가 있다. 심지어 기수들은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최근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아직 설립신고필증도 교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중원 열사가 있던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다른 경마공원보다 경쟁

제도가 가혹했다. 비경쟁성 상금은 줄이고 경쟁성 상금을 확대해 경마 순위 경쟁을 강화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2005년 개장 이래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목숨을 끊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네 명이다. 특히 문중원 열사는 정부가 직접 임명한 김낙순 마사회장 하에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대재해가 있는 공공기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사회에는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마사회 소속 기수 같은 공공부문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했다. 마사회에서 잇따라 벌어진 죽음은 다단계 외주화 구조를 폐지하고 기수와 말관리사들을 직접고용하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는데 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이재하(가) 서울노동자연대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문중원 열사의 아내

없다.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부는 문중원 열사의 억울한 죽음에 사죄하고 유족이 요구하는 모든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함께 참가합시다!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문중원 열사 진상 규명 및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

2020년 2월 8일(토) 오후 2시 / 한국마사회 본관(과천경마장) 앞